

이스라엘·이란 설전...“이란은 나치” vs “자위권 행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놓고 격론
美 “이란 규탄, 긴장고조 추구안해”...유엔 총장 “자제 할 시기”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하루 뒤인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에서는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란 대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확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대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을 막기 위해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쟁 당사국을 뺀 나머지 국가 대사들은 긴장 완화를 위한 당사국의 자제와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일요일인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전날 감행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보복공격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이란은 국민과 국가안보, 주권,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단언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라바니 대사는 또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할 의도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에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는 의도로 보였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오늘날 이란 정권은 나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천년제국 건설을 구상한 것처럼 이란의 급진 시아파 정권도 지역을 가로질러 그 나머지를 추구한다. 이것이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이 우월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이란의 잔혹한 공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더는 대리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에르단 대사는 이어 “안보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란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활하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작동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이는 이스라엘이나 중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보복공격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추가 확전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안보리는 명백히 이란의 공격 행위를 비난하고 이란 및 이란의 파트너와 대리자들은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은 순전히 방어적이었다”라고 강조한 뒤 “이란과 대리세력들이 미국이나, 추가로 이스라엘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태블릿 PC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안보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에 어떤 행동을 취하면 이란은 이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바실리 네넨바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서방 상임이사국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습을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국제법상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 원칙이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며 “그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모두가 명확히 보고 있다”라고 책임을 미국 등 서방측에 돌렸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각국이)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할 시기이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역사 더 이상의 전쟁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에 걸쳐 이스라엘에 탄도·순항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하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가했다. /연합뉴스

“중동 정책 실망”

美 바이든 지지율 급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과 외면이 심화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로 인해 특히 젊은층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모습이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 9~12일(현지시간) 미국의 성인 2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는 전쟁 직후인 지난해 10월 23일(44%)과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동일인 조사 가운데 최저치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37%에 달했다. 군사 행동을 줄이도록 해야한다는 답변도 23%로 집계됐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의 42%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되 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예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32%로 뒤를 이었고,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25%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공략중인 18~29세 지지세 감소가 특히 급격했다. 젊은층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지지는 지난 2월 51%에서 현재 40%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연합뉴스

수단 내전 1년 ‘출구가 없다’

사망 1만5000명·피란 850만명...1800만명 식량 불안정 직면

북아프리카 수단의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의 무력 충돌로 시작된 내전이 15일이면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양측의 교전으로 1만 5000명 넘게 숨지고 850만명이 피란길에 나서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지만 전쟁의 끝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900만의 수단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지만 중동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려 ‘잊힌 전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정부군과 RSF는 2019년 8월 쿠테타를 일으켜 30년간 장기 집권한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2021년 10월 과도정부마저 무너뜨리며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의 공백기에 주도권을 놓고 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큰 라인 수단을 유혈 사태로 몰고 갔다.

지난해 4월 15일 RSF가 병력을 수도 하르툼에 배치하면서 양측의 무력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RSF는 이후 하르툼 일부와 서부 다르푸르를 거점으로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교전을 지속하고 있다.

내전 발발 직후 교전이 격화하면서 각국 외교관과 외국인의 대피가 전쟁 초기에 이뤄졌고, 전쟁의 포화를 피한 현지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피란길을 떠났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마치 어찌부터 비상사태가 시작된 것처럼 매일 수천 명이 수단을 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쟁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D)는 1년 가까이 이어진 수단 내전으로 4월 현재 일부 군인을 포함해 최소 1만 60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피란에 나선 수단 주민은 85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약 200만명이 국경을 넘어 차드, 이집트,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으로 탈출했고 최소 650만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수단의 18개 주에 흩어져 있다.

1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수단이 현재 “최악의 인도적 재난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국내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식량과 깨끗한 물, 의약품, 연료 등 필수품의 극심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품귀 현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유엔과 현지 구호 활동가 등에 따르면 수단 인구 4900만명 중 약 절반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단 전역에서 1800만명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고 그중 500만명은 기근에 가까운 재난 수준에 처해 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경고했다. /연합뉴스

“인도 청년 수많은 기회 상상도 못할 것”

‘3선 도전’ 모디 총리, 일자리 창출·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약속

3선에 도전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강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했다.

14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뉴델리에 있는 여당 인도국민당(BJP) 당사에서 ‘모디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의 초점은 삶의 존엄성과 질에 있으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와 항공, 철도, 전기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제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인도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회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또 70세 이상의 모든 인도인에게 무료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가정에 도시가스 연결을 추진하는 등 복지 프로그램

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비농업 소액 대출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빈곤층 3000만명에게 무료 주택 제공, 2029년까지 국민 8억명에게 무료 곡물 프로그램 제공 등을 약속했다.

모디 총리는 “14억 인도인의 야망은 모디의 사명”이라며 “국민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 이 선언문을 내놓는다. 이 선언문을 이행하고 발전된 인도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억명이 넘는 인구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오는 19일 연방원회를 뽑는 총선을 시작한다. 선거는 6주에 걸쳐 7단계로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에서 실시되지만, 전자투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표는 오는 6월 4일 하루 만에 이뤄진다.

인도 뉴스채널 인디아TV가 진행해 이달 초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 BJP는 연방의원 543석 가운데 34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모디 총리의 3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